

해수부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900억원 추가지원

피해 최소화 위해 기존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분야 지원 등 추가대책 마련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시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 긴급 지원
부산항 중심 중일 역내 기항 정기컨선에 총 50억원 운항인센티브 제공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추가 3개월 연장, 4개 PA 상생펀드 280억원까지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정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긴급지원대책에 지원이 추가된 분야로는 △화물운송분야 △항만운영분야 △한·중 여객운송분야이며, 신규 지원된 분야에는 △한·일 여객운송분야 △연안여객분야이다.

먼저 ‘화물운송분야’에서는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부정기, 정기를 포함한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인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선사들은 현 사태로 인해



<예산 조기집행 대상 내역>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여객선사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매년 12월 지급하는 운항결손액의 70%(약 14억원)를 3월 중 선지급	약 14억원
	도시민 운임 보조	매월 사후정산 지급중인 운임보조금을 전년 지급액 수준의 반기분에 대해 1분기 내 선지급	약 70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분기별 지급하는 결손보상금 중 2분기 집행액을 선지급하여 사업비의 50% 집행	약 60억원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	1분기 보조금(3월 신청/12~2월 사용분) 지급시기 단축(先지급 後검증/1~2개월 단축)	약 50억원
	전환교통 보조	전환교통지원 사업자 선정(3월중) 시 보조금 선지급(50% 이내)	약 15.4억원

중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중 조선소에서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운영분야’에서는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손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이와관련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한·중 여객운송분야’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므로 해당 혜택에는 미적용된다.

이어 신규 지원 분야의 ‘한·일 여객운송분야’는 코로나 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PA별 상생펀드 운영내용>

구분	펀드명	출연액		금융기관
		기존	확대	
BPA	부산항만공사 중소기업 상생펀드	60억원	120억원	IBK
YGPA	(기업은행) 동반성장 협력대출 (수협은행) 동반성장 협력대출	55억원	60억원	IBK 수협
UPA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 협력대출	30억원	60억원	IBK
IPA	상생협력 대출상품 지원사업	2억원	40억원 (단계적 확대)	수협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운송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약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20억원을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가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 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적선박의 국제협약위반 예외적용요청 서한발급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양수산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서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사항이 적발돼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는 3월 17

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돼

79개 외·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 근로자 2,000여명 지원 가능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까지 진행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지만,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항 24개 업체 645명, 내항 55개 업체 1,419명 총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14개의 한·중 여객선사는 지난 1월 30일, 10개사 한·일 여객선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대상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해양수산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어선을 포함한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선박검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만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임시검사 항목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선박설비의 보완 또는 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이 있다.

또한 해수부는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 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부로베리타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현황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해양수산부가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진행된 영상회의를 통해 해운항만분야 공공기관 및 업·단체와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해수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215억원 규모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1,065억원 규모의 지원에 대해서는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수부는 아직 지원이 개시되지 않은 사업인 '화물운송선사·항만하역사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조건 충족 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해운항만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 해운항만업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 △항만 운영사에 대한 항비 감면 등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것 △연안여객선의 여객 감소에 따른 운항횟수 축소가 필요하나 도서민의 교통권을 위해 축소가 어렵다면 유류비 등 운항 결손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해수부는 이번에 건의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7일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장, 3개 유관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일 여객선사 및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측이 3월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재정지원 측면에서 해수부는 3월 9일부터 감염정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정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100% 감면하였고,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을 감안하여 30%까지 감면하였다. 그러나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한 점을 감안하여,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인 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이는 한·일 카페리선사 총 2개사에 11.5백만원을 추가 감면하여 월 약 46백만원을 감면하게 되었으며,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상업활동 업체 총 17개사에는 260백만원을 추가 감면하여 월 약 433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특히 터미널 임대료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60% 감면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원 측면에서 정부는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YGPA, 2020년 광양항 인센티브 확정 발표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 지원 항목 10억원 신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 시행한다.

3월 23일 YGP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항목에 10억원을 신설해 광양항 이용 선사를 지원하는 등 위기 대응 방안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센티브 항목은 환적화물, 터미널간 셔틀화물, 신규 항로 개설, 부정기선, 운영사 및 포워드 지원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이다.

특히 환적화물과 부정기선을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컨테이너 유치 활동을 전개해 물량 유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수·광양항 이용객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는 임대료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해인](#)